

농지 황폐·농촌 '썰물' 눈앞

생존권 흔들 영세소농 3년간 탈농 도시문제 예고

전업희망 44% "단순노동"...직업훈련 구멍 입증

□ 농진청 조사결과 의미

이흥동 기자

개방화 파고 앞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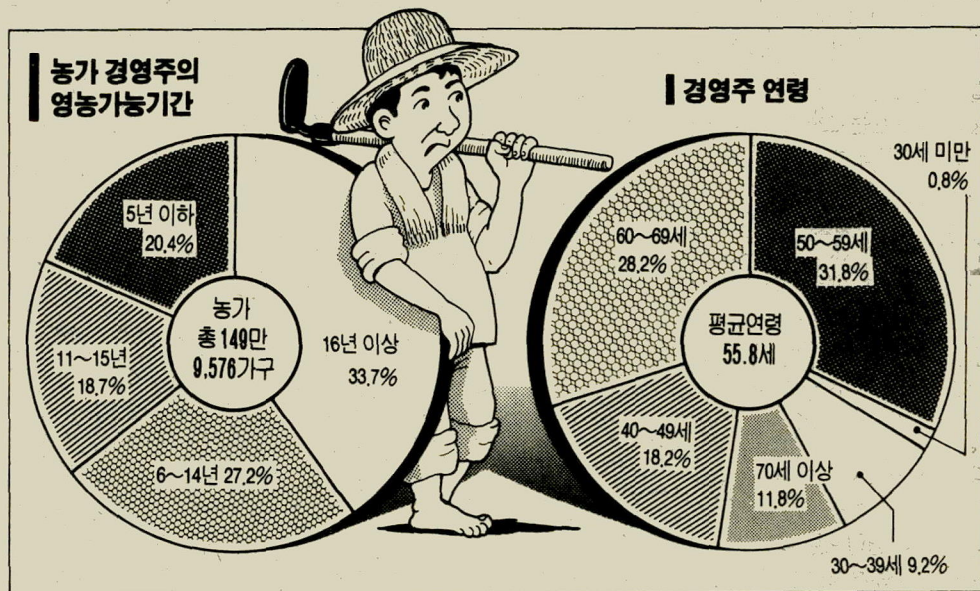
11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농가 전수조사 결과는 이를 피부에 닿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암울하다.

우선 농민들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별 동요가 없다. 조사 결과 3년 안에 이농할 것이라고 답변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2.9%(4만 3천4백40가구)에 불과해 자연감소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영농규모를 줄이겠다는 농가가 6.3%인 데 반해, 11.1%가 영농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욕을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영농인구의 고령화와 전업으로 농업이 더욱 몰락해갈 것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가경영주들이 스스로 잡은 은퇴 시기는 전체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농가 가운데 농사를 물려받겠다는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불과 13만4천가구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10년 안에 최소한 60만 안팎의 농가가 농업을 저버리게 된다.

농진청은 이에 더해 앞으로 16년 뒤인 2010년께가 되면 현재



경영주의 33.6% 정도만 남게 되고, 일부 영농후계자들을 보태더라도 약 60만 가구 정도만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직 농업개방화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곧 쌀 수입 등이 이뤄지면서 농촌사회의 동요가 현실화할 경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업에서 이탈할 농민들의 희망 직종은 단순노동과 상업 서비스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전업을 희망한 38만3천6백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4.0%가 단순노동을 하겠다고 답했고, 상업이 26.1%, 서비스업이 13.6%로 대종을 이뤘다.

이 가운데 특히 3년 이내 이농

을 희망한 농가는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해, 농업으로 가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점이 이농의 상당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은퇴 또는 전업하는 농가가 농지를 처분하는 방법은 영농후계자 또는 비영농후계자에게 승계하겠다는 답변이 약 70%인 반면, 임대하거나 팔겠다는 답변도 18.4%나 돼 가구당 농지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한 감소도 함께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경영주가 스스로의 기술수준이 상급이라고 답변한 이는 재배 작목별로 43.3%, 시설채소 48.5%, 과수 38.1%였으며, 하급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벼 8.1%, 시설채소 3.8%,

과수 8.2%였다.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조사를 실시한 농진청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등으로 농민들의 동요가 심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로 조사한 결과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사는 앞으로 농업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별 농가들이 작목 선택, 농외 취업, 자금 알선, 전업교육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자료를 농가별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농가경영 지도는 농촌지도소를 통해 이뤄진다.